

TRF REPORT

태재연구재단리포트

태재연구재단 연구보고서 · 국가경영 부문

열망에서 제도로 : 미국의 사회질서 형성과정

연구팀

연구팀장 : 김세진 책임연구원

팀원 : 김세헌 연구원

2026년 6월 30일

이 보고서는 태재연구재단 <국가경영> 연구팀에서 수행한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중 인용 사항을 제외한 집필 내용 저작권은 태재연구재단이 갖고 있습니다.

재단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내용에 대해 사전 협의 및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태재연구재단

태재연구재단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로의 대전환’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도시경영-국가경영-세계경영-세계공동체 차원의 13가지 의제를 연구합니다. 국가경영 연구팀은 한반도 미래산업, 7대 분야 초일류 역량 확보, 안목·역량·도덕성을 갖춘 선출직 인재 양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국가경영 부문 연구보고서로 발간되었습니다.

기획

태재연구재단 | 국가경영 연구팀

편집·디자인

태재연구재단

연구팀장

김세진 책임연구원

팀원

김세현 연구원

발행

2026년 6월 30일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백석동길 222

연락처

02-6325-7378

홈페이지

<https://taejaefoundation.org>

발간번호

TRF-N-004



목차

CHAPTER 1	서론	1
CHAPTER 2	열망 : 미국 독립과 건국의 이념	2
CHAPTER 3	시스템 : 헌법과 연방제	5
CHAPTER 4	삶 : 새로운 패러다임의 발현	8
CHAPTER 5	결론	1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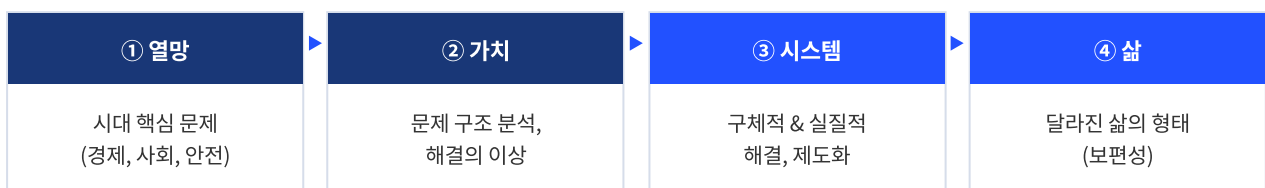
태재연구재단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로의 대전환’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도시경영-국가경영-세계경영-세계공동체 차원의 13가지 의제를 연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가경영 연구팀은 **한반도 미래산업, 7대 분야 초일류 역량 확보, 안목·역량·도덕성을 갖춘 선출직 인재 양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연구의 문제 의식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출발한다.

첫째, 산업사회의 지속불가능성 극복이다. 우리나라는 산업사회 질서에 가장 잘 적응한 나라 중 하나지만, 그로 인해 지속불가능 문제 또한 떠안고 있다. 서울-수도권 편중으로 인해 생활 인프라, 학업 및 일자리 등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삶의 질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에서 핵·대량살상무기 위협에 처해있다. 이외에도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솔루션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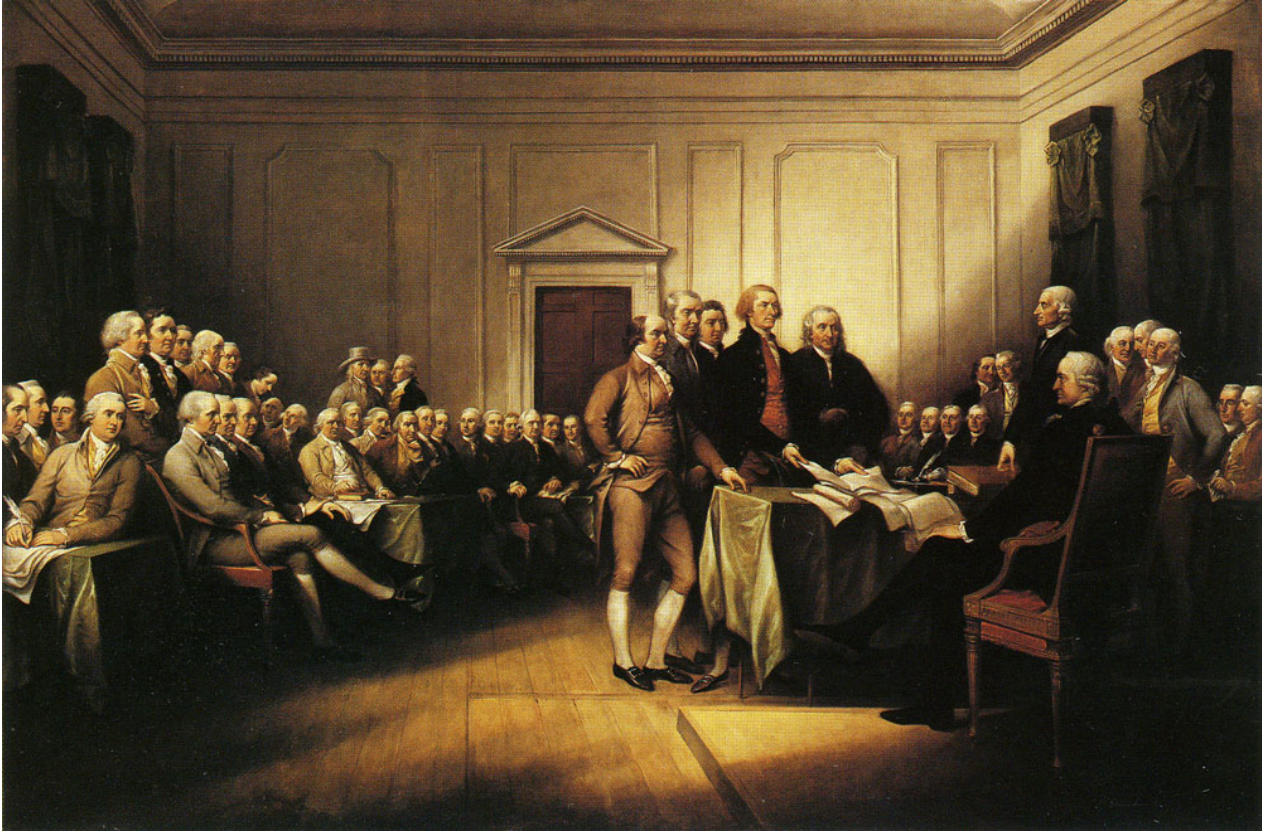
둘째, 미래 정보사회의 경쟁력 확보다. 디지털·AI기술은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정치경제공동체 전반의 영역까지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대변혁 속에 펼쳐질 미래를 앞서 내다보고 가능성과 기회를 선점하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선출직 인재들이 초일류 수준의 안목과 역량을 갖고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정당은 그러한 인재를 끊임없이 배출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미국과 중국의 정당과 인재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 아래 태재연구재단 국가경영팀은 이번 리포트를 통해 미국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고 했다. 미국이 산업사회의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사건과 변수를 살핌으로써 미래사회 변화의 단서와 요구되는 역량을 찾기 위함이다. 우선 미국사회의 변화를 ① 변화에 대한 시민 사회 열망 발현 ② 구시대의 틀을 극복하는 가치의 대두 ③ 습득한 가치에 기반한 사회시스템 변혁 ④ 변화한 사회에 적합한 삶의 보편화의 **4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핵심인재들이 누구에게,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창조하게 됐는지 구분했다.



[표 1] 사회변화의 4단계

열망 : 미국 독립과 건국의 이념



[그림 1] ‘독립 선언(Declaration of Independence),’ 존 트럼볼

1607년부터 1733년에 걸쳐 북미 동부 연안에 세워진 **13개의 영국 식민지**는 본토에서 더 이상의 활로를 모색할 수 없던 영국인들에게 기회를 열어주었다. 특히 자기만의 농장을 소유하고 싶었던 자영농들이 가족 단위로 이주해 농지를 개간하고, 정주지를 넓히고자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전쟁도 불사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그러나 당시 영국 정부와 의회에는 본국과 식민지가 법적으로는 같은 영국으로 묶여 있어도 사실상 별개 주체라고 보는 인식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아메리카 식민지의 갈등이 청구하는 지출과 인명피해는 중대한 부담으로 다가왔다.

결국 영국 정부는 7년 전쟁이 끝난 1763년에 식민지인들이 애팔래치아 산맥 서부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식민지에 설탕세(Sugar Act, 1764), 인지세(1765)를 부과하여 북미 전역(戰域)에 투입한 비용을 회수하고자 하였다. 1년 뒤인 1767년에 <타운젠드법>이 아메리카 식민지 상품에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자, 스스로를 영국인으로 정의하던 식민지인들의 생각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당시 식민지 정국의 주요 인사들은 유럽의 사회계약론적 가치에 공감하고 있었고, 식민지 역시 자연법에 의한 땅이 되기를 희망했다. 영국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영국인으로서의 권리 확보를 주장하던 충성파(Loyalists) 측에서는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구호를 앞세워 식민지의 동의 없는 입법을 규탄하고, 식민지 대표들의 의회 진출 허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본국은 오히려 병력을 파견하면서 과세에 박차를 가했다. 1770년 보스턴 학살 사건, 1773년 보스턴 차 사건 등 크고 작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며 긴장이 고조되자, 13개 식민지의 대표자들은 1774년에 첫 대륙회의를 열었으나 성과 없이 해산했다.

그러던 1776년, 토마스 페인(Thomas Paine)이 『상식(The Common Sense)』을 출간하며 식민지는 반전을 맞이했다. 페인은 사회계약론에 입각해 개인에게는 재산을 안전하게 소유하고 부당한 권력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고, 식민지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영국과 영국의 군주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페인이 식민지인들에게 독립국으로서 가야 할 길을 설득하고, 사회계약에 따른 국가를 ‘상식’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데에는 **단 50페이지면 충분했다.**

아메리카 식민지의 독립에 대한 열망은 무장 투쟁으로 확대됐다. 대륙회의는 이미 1775년부터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을 총사령관으로 대륙군을 창설하여 영국군과 교전하고 있었다.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어진 식민지 대표들은 건국의 아버지들(The Founding Fathers)이 되어 1776년 7월 4일에 <미국 독립선언문(Declaration of Independence)>을 발표했다. 독립선언문은 모든 개인들의 평등, 생명과 자유, 행복 추구를 포함하는 천부인권, 개인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개인들의 동의로부터 권력을 쓸 수 있는 정부, 본 목적에서 어긋난 정부를 폐쇄할 수 있는 개인들의 정치적 권리 등 유럽 사회계약론의 정수를 담고, 미국이 쫓아야 할 기본을 밝히며 다음 질문에 답했다.

“왕이 다스리지 않는다면, 누가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 것인가?”

독립선언문은 이 물음에 대한 미국의 첫 공식 답변이었다.

이와 같이 법과 제도 안에서 누구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의 선포는 미국의 정치, 산업, 국방 부문에 거대한 잠재력을 부여했다. 당대 식민지 최고의 지식인이기도 했던 건국의 아버지들은 로마 공화정의 역사를 배운 사람들이었고, 그때보다 발전된 미국의 이론적 토대와 시스템 위에서 실패한 과거의 이상이 비로소 실현되기를 함께 바랐다. 이들의 꿈은 지금도 미국 곳곳에 남아 있는, 로마에서 시민들에 의한 권력을 상징했던 **‘파스케스(Fasces)’** 조형들로 확인할 수 있다.

[1] 누가	[2] 누구에게	[3] 무엇을 배워	[4] 무엇을 위해	[5] 어떤 방법으로	[6] 무엇이 창조되었는가?
토마스 페인	사회계약론자	사유재산권 / 시민저항권	영국의 정치, 경제적 수탈로부터의 자유	『상식』 저술로 독립 당위성 제시	미국 독립의 열망 발현
건국의 아버지들		군주제의 부당함, 위험성	군주 없는 미국의 권력 구조 창조	개인들의 힘에 의한 권력 정의	공화정 이념, 법치주의 기반

[표 2] 열망 단계의 핵심 인재와 창조된 가치



[그림 2] 미국 하원의회 연단의 성조기 좌우에 배치된 파스케스



[그림 3] 미국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내 의자에 조각된 파스케스

시스템 : 헌법과 연방제



[그림 4] ‘미국 헌법 서명식(Scene at the Signing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하워드 찬들러 크리스티

1783년에 영국에 승리한 뒤 파리조약을 체결하며 독립을 얻어낸 미국의 다음 과제는 **국가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였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연합할 필요성이 낮아진 13개 주는 각자의 셈법에 따라 독자 행동에 나섰다. 연합회의는 뚜렷한 강제력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주들이 잔류하도록 설득했다. 진통 끝에 13개 중 12개 주 대표들이 1787년 5월에 버지니아주 대표 조지 워싱턴을 의장으로 하는 제헌의회를 열고, 연합의 규약을 대체하는 헌법제정에 착수했다. 법안은 같은 해 9월에 완성되어 연합회의의 승인을 받고, 1788년에 뉴햄프셔주에서 비준을 하게 되며 발효조건인 ‘9개 주 이상 비준’을 충족해 1789년부터 연방헌법이 시행됐다.

‘우리 미합중국 시민들(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로 시작하는 서문은 개인의 총의가 권력을 구성하는 통치 이념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양원제 입법부 - 사법부 - 대통령 중심 행정부’의 **삼권 분립**이 명시되었고, 연방과 각 주의 권한은 연방이 우위를 갖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초대 대통령으로는 조지 워싱턴이 선출됐다. 1797년 3월 4일로 두 번째 임기가 종료되자, 워싱턴은 종신 집권 종용을 거부하고 낙향했다. 이처럼 워싱턴이 임기만료에 따라 물러나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대통령의 권력은 **합의로 창출된 유한한 권력**으로 제도화됐다. 그리고 미국은 유한한 권력제도 아래 개인과 기업이 기존 유럽사회의 억압하는 권력구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경제난 타파와 해밀턴의 금융 시스템

미국의 다음 숙제는 경제난 타파였다. 독립 전쟁 이후 13개 주가 갈라선 근본적 원인은 개별 주의 통상 권한과 세금, 부채 문제였다. 각 주는 전쟁의 수혜를 누리면서도 전쟁으로 인한 대(對) 유럽 부채 상황에는 미온적이었다. 각자도생 정국에서도 연방 헌법이 비교적 빠르게 제정될 수 있었던 까닭 역시 복잡한 경제 문제는 미뤄두고 통치 체계부터 확립하자는 합의 덕분이었다. 칼을 빼든 것은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이었다. 해밀턴은 독립 전쟁에서 워싱턴의 부관으로 참전한 군인이자, 정계에서는 뉴욕 주 대표로 활동하며 강력한 연방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대표적 연방주의자(Federalist)였다. 1789년, 워싱턴 행정부 초대 재무장관에 오른 해밀턴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에서 영감을 얻어 경제 역동성이 곧 미래 미국의 국력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

이듬해, 해밀턴은 연방 하원에 『공공신용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Public Credit)』를 제출해 구조화된 금융 시스템 도입을 설명했다. 그는 먼저 ‘부채 인수(Assumption)’를 추진해 각 주의 채권을 연방 명의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연방 정부에서 부채를 책임지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면, 대미 신용이 상승해 앞으로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의 예상은 정확히 맞아, 오늘날까지 미국 국채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근거가 되었다. 동시에 세수 관리를 안정화하고 범국가적 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연방 은행 설립을 주장, **1791년에 미국 최초의 중앙은행**이 업무를 개시했다. 이후 미국의 중앙은행 제도는 여러 번의 변화를 거쳐 오늘날 연방준비제도(United States Federal Reserve System)의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해밀턴은 분업으로 인한 대량 생산 사회의 도래와 화폐 경제 예측을 받아들여 『제조업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Manufactures)』를 내고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하고자 했다. 그는 후발 주자 미국은 농업 부문에서 유럽에게 아직 도전하기 어려움을 주장하며, 우선 중상주의 정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에 기반해 농업도 동반 상승을 꾀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 공산품에는 보호 관세가 매겨졌으며, 반대로 제조업에 필요한 원자재에 부과되는 관세는 철폐됐다.

제퍼슨과 권력의 균형

해밀턴의 정책은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산업 생태계 다변화를 이룬 산업사회 미국의 초석이지만, 당시에는 심각한 사회 분열을 야기했다. 정치 부문에서는 연방이 지속적으로 힘을 키워가는 것을 미국 공화정에 대한 도전으로 보는 우려가 팽배했고, 경제 부문에서는 중상주의 정책 기조에서 소외된 남부 농장주들의 반발이 거셌다. 대중 역시 과도한 조세 정책과 연방의 권력 행사에 반감을 가졌고, 1791년에는 위스키에 연방세가 부과되자 폭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누적된 불만의 결과로, 1801년 대선에서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이 선출되었다. 제퍼슨은 강력한 연방이 과도한 중앙 집권화를 불러와 각 주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을 경계해온 공화주의자(Republican) 핵심 인사였다. 그는 특히 존 로크와 몽테스키외의 영향을 많이 받아 미국의 개인들은 표현, 종교 등 당시에는 허용되지 않던 폭넓은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믿었고, 이렇게 자유로운 자영농들에 의한 미국을 이상으로 여겼다.

제퍼슨은 취임 즉시 1798년에 제정된 ‘외국인 및 치안법(Alien and Sedition Acts)’에 제동을 걸었다. 목적은 외부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세력의 견제였으나, 실제로는 연방 정책에 반대하는 미국 내 언론과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있었다. 제퍼슨은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사들을 사면하고, 시한입법으로 제정된 해당 법률이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경제 부문에서는 1803년 **루이지애나 매입**이 있었다. 제퍼슨은 당시로서는 큰 돈인 1,500만 달러를 들여 자신의 헌법학적 견해까지 수정해가며 프랑스가 내놓은 북미 중부의 거대한 영역을 사들여, 미국에 새로운 잠재적 농토를 안겼다. 비록 본인은 공화주의자로서 연방 수장인 대통령직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으나, 그러면서도 연방주의자들을 행정부에 등용하고 해밀턴과 협력하는 등 워싱턴이 정립한 대통령의 기본 소임들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의 사상은 ‘제퍼슨 민주주의(Jeffersonian democracy)’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되어, 미국이 미래 산업사회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한 권력의 ‘틀 - 제도 - 가치’의 마지막 단계를 완성했다.

“연방의 권력과 부는 어디로, 어떻게, 누구에 의해 행사되어야 하는가?”

독립 이후 미국 주요 국가경영 인재들의 행보는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었다.

[1] 누가	[2] 누구에게	[3] 무엇을 배워	[4] 무엇을 위해	[5] 어떤 방법으로	[6] 무엇이 창조되었는가?
조지 워싱턴	사회계약론자	합의에 의한 유한한 권력	미국에서의 군주제 구습 부활 차단	재선 후 퇴임	개인 주도 사회 권력의 모범
알렉산더 해밀턴	애덤 스미스	경제 안정 위한 관료제 역할 / 중상주의 사회	미국 경제력 신장 / 중상주의 시대 대비	연방 부채 통합 / 상업, 금융 거점 마련	미국 산업사회 제도적 기반
토마스 제퍼슨	사회계약론자 (존 로크)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중요성	연방 비대화 견제, 공화주의 미국 실현	정파 갈등 중재 / 반대파 인재 등용	균형, 협력의 정치 전통

[표 3] 시스템 단계의 핵심 인재와 창조된 제도

삶 : 새로운 패러다임의 발현



[그림 5] 케임브리지시 하버드 칼리지 구교사(舊校舍)들의 전경 (View of the Ancient Buildings belonging to Harvard-College, Cambridge), 제임스 트랜처드

i. 대학

식민지 북동부 연안에서는 청교도들에 의해 미국의 새로운 비전이 싹트고 있었다. 이들은 장 칼뱅(Jean Calvin)의 영향으로 왕권신수설을 거부하고 칼뱅주의에 입각한 군주의 제한된 권력을 주장하는 한편, 개인의 신앙이란 한 인간과 신 사이의 개인적 문제이지 국가가 나설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다. 국왕 중심의 영국 성공회는 이러한 주장을 위협으로 여겼고, 성공회와 타협하지 못한 청교도들은 식민지 아메리카로 이주해야 했다. 일련의 경험은 아메리카의 청교도들로 하여금 개인의 양심과 자유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국가를 꿈꾸게 하였고, 버지니아 종교자유법(Virginia Statute for Religious Freedom) 제정과 **연방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의 자유 명시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들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성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인문, 자연 탐구 역시 홀대하지 않고 신의 뜻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여겼다. 이 영향으로 도해한 청교도들 사이에는 문해력을 갖추고 고등교육을 받은 이들이 다수 있었고, 그들의 주도로 신의 뜻에 따라 아메리카를 가꿔갈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들이 세워졌다. 식민지 최초의 대학교는 1636년에 매사추세츠에 개교한 ‘뉴 칼리지(New College)’였다. 뉴 칼리지는 학교에 유산을 남긴 목사 존 하버드(John Harvard)를 기리며 1639년에 교명을 하버드 칼리지(Harvard College)로 바꾼 뒤, 하버드대학교로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하버드 졸업생들은 1701년에 컬리지 스쿨(Collegiate School)을 세웠고, 컬리지 스쿨 졸업생들은 1746년에 칼리지 오브 뉴저지(College of New Jersey)를 세웠다. 이들 역시 각각 오늘날 예일대학교, 프린스턴대학교로 이어지고 있다. 청교도 신학교들의 등장은 다른 식민지인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되어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College of William & Mary, 1693), 킹스 칼리지(King's College, 현 컬럼비아대학교, 1754), 칼리지 오브 로드아일랜드(College of Rhode Island, 현 브라운대학교, 1764), 퀸스 칼리지(Queen's College, 현 럿거스대학교, 1766), 님머스대학교(Dartmouth College, 1769) 등 오늘날 미국을 대표하는 명문대학들이 비슷한 시기에 개교했고, 칼리지 오브 필라델피아(College of Philadelphia, 현 펜실베이니아대학교, 1755)와 같이 종교와 무관한 식민지 교육에 뜻을 둔 학교도 들어섰다. 이렇게 세워진 학교들은 ‘**콜로니얼 칼리지(Colonial Colleges)**’라는 별명을 얻었고, 정계의 정교분리 기초와 이성 탐구에 대한 개방성에 힘입어 종합대학으로 변모해 산업사회 미국을 일군 인재들을 낳고, 전 세계에서 분야를 막론하고 온갖 인재들이 미국으로 몰려들게 하는 기초토대가 되었다.

ii. 미국인의 정체성

해밀턴과 제퍼슨의 시대를 거치며 제도적 연방으로서 미국의 틀은 잡혔지만, 여전히 각 주와 개인들은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을 겪으며 미국인의 공통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했다. 당시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1812년에 발발한 미영전쟁이다. 미군 병사들은 소극적으로 싸웠고, 일부는 탈영을 감행하기도 했다. 주 정부 역시 연방 통제에 비협조적이었다. 종전 후에는 미국인 사이에서 반영 감정을 토대로 한 일치 의식이 생겨나 친영파 정치인들의 경력이 끝나는 등의 사건이 있었지만, 일시적이었다. 전후 연방 정부에서 전쟁 예방을 위해 공업화를 가속하고 해군력을 증강해 미국 무역상을 보호하는 등 중상주의 노선을 천명하자, 농업 중심의 남부는 이에 반발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노예제**였다. 노예제는 도덕, 경제, 국가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당대 가장 뜨거운 화두였다. 미국 정치의 타협 정신은 노예제 갈등 정국에서 당장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했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1861년에 노예제에 반대하는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위기감이 고조된 남부는 독립을 선언하고 남북전쟁(The Civil War)을 일으켰다. 북부는 초반 고전을 딛고 연방 차원에서 끌어올린 군수 역량을 발휘해 점차 승기를 잡았다. 링컨은 자유, 평등의 건국 이념을 내세워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연방 유지를 호소했다. 정부의 성격을 재확인한 문장으로 유명한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당시 그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¹

북부는 1865년에 전쟁을 종결하고 남부에 군정을 펼쳤지만, 개인에 대해서는 연방에 충성하는 조건으로 문책을 최소화하고 참정권도 돌려주었다. 이렇게 시작된 재건 시대(Reconstruction Era) 미국은 급격한 변화로 인한 시민 충돌이 이어지며 혼란이 계속됐다. 하지만 전쟁을 거친 미국인들 사이에는 **단일 국가로서의 인식론적 미국, 미국인의 정체성이 삶으로서 보편화**되어 있었다. 링컨의 리더십과 혜안을 바탕으로 미국은 개인과 연방공동체의 계약을 갱신하고, 재건 시대를 다가올 산업사회에 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1] 누가	[2] 누구에게	[3] 무엇을 배워	[4] 무엇을 위해	[5] 어떤 방법으로	[6] 무엇이 창조되었는가?
식민지 대학	청교도 정신 (장 칼뱅)	종교적 믿음과 이성의 관계	식민지 성직자 양성 / 인문, 자연 탐구	신학교 설립 (종합대학 변화)	미국 초일류 명문대학
A. 링컨	건국의 아버지들	자유, 평등, 시민 합의의 가치	연방 유지 호소	<노예 해방 선언>, 전후 남부 포용	단일 국가로서 인식론적 미국

[표 4] 삶 단계의 핵심 주체와 보편화된 가치

¹ “87년 전, 우리 선조들은 이 대륙에 자유를 바탕으로 탄생하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신념에 헌신하는 새로운 국가를 세웠습니다(Four score and seven years ago, our fathers brought forth on this continent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결론

미국의 사례는 시대의 핵심문제에 대한 열망이 가치로 대두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제도화된 뒤, 보편적인 삶의 형태로 안착되는 구조를 드러낸다.

지금까지 신생독립국 미국의 발전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봤다. 흠어지면 생존할 수 없던 식민지 초기의 경험과 최강대국 영국을 상대로 한 독립전쟁은 미국의 지도자들에게 결속된 공동체가 갖는 위력을 보여주었고, 이는 연방 결성과 유지의 의지로 표출됐다. 그리고 미국은 세상에 없던, 산업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권력 구조와 사회 시스템 그리고 경제질서를 만들어냈다. 장차 개인이 삶의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창조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결과적으로 미국이 산업사회의 주역으로 올라서게 됐다.

재건 시대 이후 미국의 경제, 사회 질서는 대체로 정부보다 개인과 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헨리 포드(Henry Ford)**가 대표적이다. 포드는 공장에 자동, 대량생산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직원들의 임금 인상, 노동 강도 완화에 투자했다. 이는 저임금 노동 착취를 당연히 여기던 당대의 통념에 배치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포드는 노동자들의 시간과 주머니 사정을 넉넉하게 해주면 그들이 잠재적 고객이 되어 소비 시장에 유입되리라 생각했고, 따라서 미래 기업의 이윤은 그들의 구매력 증진에 달려있으리라 예측했다. 그의 방침은 큰 성공을 거두어 동시대 5%의 부유층에게는 큰 시사점이 되었고, 95%의 개인들에게는 자본주의 사회의 이상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삶, 즉 **중산층 모델**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형성된 미국의 정치, 산업, 생활상은 두 차례 세계대전과 냉전을 거치며 효용과 힘을 증명했고, 전 세계의 동경과 투쟁심을 함께 불러일으키는 산업사회의 선도 모델이 됐다. 하지만 냉전 이후 미국은 뚜렷한 새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세계의 갈등과 지속불가능한 위기 극복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국가와 세계의 변화를 주도했던 이들은 개인-공동체 관계의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다. 미국의 사례는 시대의 핵심문제에 대한 열망(영국으로부터의 독립,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번영)이 다음단계 시대를 점지하는 가치(사회계약, 삼권분립, 자본주의, 연방주의)와 결합하며 새로운 시스템으로 제도화(연방국가, 대통령제, 시장경제 등)되고 이후 보편적인 삶의 형태(교육, 정체성 등)로 안착되는 구조를 드러낸다. 또한 알렉산더 해밀턴, 토마스 제퍼슨, 에이브러햄 링컨 등이 배운 이러한 관점에서 본 리포트는 장차 다가올 정보사회가 요구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와 질서 그리고 제도의 변화에 대해 탐색하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미래형정당과 선출직 인재에게 필요한 안목과 역량이 무엇인지 가능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태재연구재단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사회로의 대전환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열망에서 제도로 : 미국의 사회질서 형성과정

태재연구재단 | 국가경영 연구팀

서울특별시 종로구 백석동길 222 · 02-6325-7378

<https://taejaefoundation.org>

